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시·도 교육감 반발

정부 재정 효율화 계획에 “지방 교육 재정 파탄 우려”

각 교육청 예산의 10% 어린이집 무상 보육에 편성 의무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지방 교육재정이 파탄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교육정별 편성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의무지출경비는 중앙부처가 지방조직에 예산을 내려보낼 때 강제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경비를 말한다. 지방조직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재량적 지출경비'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누리과정이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면, 각 교육청은 예산의 10%가량을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으로 책정해야 한다. 만약 다른 곳에 쓰게 되면 이들

해 예산 편성 때 그만큼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볼 수 있다”며 “시·도 교육감들이 임의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일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부교육감회의를 소집,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침을 설명하고, 누리과정 예산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문제를 협의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지방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의무지출경비 지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

는 29일 제주에서 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면 재정이 완전히 파탄될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 교육감은 “중앙에서 통제하고 옥죄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지방교육자치 정신에도 어긋난다”면서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희망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을 내고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가 아닌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면 그만큼 학생들의 교육기회는 심각하게 위축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에서 “정부가 교육을 걱정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기존 내국세 20.27%에서 5% 올려 25.27%로 교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학생수 50%로 늘리면 교부금 450억 줄어”

전남교육청, 교부금 배분기준 조정 반발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생이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주기로 한데 대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입장이 확연하게 갈렸다.

학생 수가 많은 광주시교육청은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환영했다. 반면 학교 수는 많고, 학생 수는 적은 전남도교육청은 “농촌학교와 작은 학교를 없애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의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수요가 큰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으로, 현재 정부는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등의 정량적 지표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부금을 배분하고 있다. 배분 기준은 학교 수 50%, 학급 수 14%, 학생 수 36%다. 학생 수 비중이 36%인 것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구체적인 배분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학생 수 비중을 36%에서 50%로 확대할 경우 전남도교육청에 내려오는 교부금은 약 450억원 가량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 학교 신·이설경비 등은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을 제외하고, 학교운영비 및 기관운영비 등을 교부금으로 3500억원 가량 배분받고 있다. 하지만 학교수를 50%에서 36%로, 학생수를 36%에서 50%로 바꾸게 되면 약 45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임의한 전남도교육청 예산과장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재원이 더 편중되고, 반대 지역은 교육의 질이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가 교육에서도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임 과장은 “학생 수 감소를 예산 줄이기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교육환경을 만들어갈 기회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권고 기준을 마련해 소규모 학교의 자발적인 통·폐합을 유도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전남도교육청은 우려했다.

섬 지역이 많은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어촌 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반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다. 전남지역은 학생이 1명인 분교가 4곳에 달하고, 교사 1명만 근무하는 분교가 20곳에 달할 정도로 소규모 학교가 많아 통·폐합에 대한 걱정이 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회의원 연구모임 '나무 심는 사람들'과 (사)나무 심는 사람들 회원들이 지난 9일 몽골 고비사막에서 나무를 심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초원의 나라’ 몽골 국토 78%가 사막화

바람만 남고 초원 사라져 한반도에 황사피해 심각

‘사막화 신속하는 몽골’ 1면서 계속

모래를 날리는 세찬 바람 탓에 일행의 옷은 흙먼지로 뒤덮였다. 선글라스 없이는 눈을 뜨기도 힘들었다. 현지인들은 바람이 심할 땐 집이 날아갈 것 같아 잠을 못 이룰 정도라고 했다.

이튿날 들른 바양자도 황폐한 땅이었다. 바양자는 몽골어로 ‘나무가 많다’는

뜻이지만 이름과 달리 나무는 거의 없었다. 마을 주민들은 “30~40년 전까지는 숲이 우거져 사람이 들어가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와 저조한 강수량 등이 몽골 사막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몽골의 연평균 강수량은 245mm(세계 750mm)에 불과하다. 최근 30년간 강 887개와 호수 1166개가 사

라했다는 조사도 있다. 여기에 지나친 방목도 사막화의 큰 원인이다. 현재 몽골에서 사육하는 소·말·낙타·양 등 가축은 5000만두다.

몽골 사막화가 계속되면 지구는 점차 산소가 부족해져 야생동물은 멸종위기에 이르고 물 부족현상으로 작물재배가 불가능해진다고 한다. 특히 몽골의 사막화는 중국과 한반도, 동남아 황사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네팔 또 7.3 강진... 외상환자 줄이어 주민들 공포

광주 2차구호단 여진 속 진로...임산부 텐트로 옮겨 출산

119 구조대도 현지 군인과 복구작업 활발...내일 귀국

전남대병원 의료진이 전한 현지상황

“난생 처음 건물에서 지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12일(현지시간) 네팔에 또 다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8일부터 네팔 람릿푸르 마니길 지역에서 의료 및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 2차 구호단 모두가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에서 의료 및 구호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전남대병원 의료진과 광주시소방본부 119구조대는 “2차 구호단 모두 아무런 피해없이 무사하다”고 13일 광주주요에 전해왔다.

전남대병원 의료진단을 맡고 있는 심준호 교수에 따르면 12일 오후 12시50분(현지시간) 오전 진로를 마친 뒤 점심 식사를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중 건물 전체가 심하게 요동쳤다.

일부는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기도 했고, 모두 괴성을 지르며 밖으로 대피했다.

건물 밖에서도 땅의 진동은 계속됐으며, 이후에도 6.2와 5.3 규모의 여진이 세



심준호 교수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20~30초의 짧은 진동이었지만, 지진의 전율을 느꼈다”고 말했다.

전대병원 의료진은 여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의료 캠프를 건물 밖으로 옮겼으며, 이날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외상 환자들이 줄어 있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진 속에서도 이날 20대 임산부가 전남대병원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아 아내 아이를 출산했다. 지진이 발생하자 의료진들은 임산부를 건물 밖 텐트로 옮긴 뒤 출산을 도왔다. 출산 뒤 지혈이 되지 않아 애통해했지만, 지혈에 성공했

차례 더 이어졌지만 의료진들은 모두 무사했다.

의료단장을 맡고 있는 신준호 전대병원 공공의료실장은 “의료진 대부분이 지금까지 단 한번도 지진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20~30초의 짧은 진동이었지만, 지진의 전율을 느꼈다”고 말했다.

전대병원 의료진은 여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의료 캠프를 건물 밖으로 옮겼으며, 이날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외상 환자들이 줄어 있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진 속에서도 이날 20대 임산부가 전남대병원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아 아내 아이를 출산했다. 지진이 발생하자 의료진들은 임산부를 건물 밖 텐트로 옮긴 뒤 출산을 도왔다. 출산 뒤 지혈이 되지 않아 애통해했지만, 지혈에 성공했

고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다.

의료진 일부는 이날 오후 광주시 소방본부 119구조대원들과 함께 피해를 입은 인근 산악 마을을 돌며 진로활동을 벌였고, 119 구조대원들은 네팔 군인과 협력 속에 복구작업을 펼쳤다.

광주시 소방본부 김희철 소방령은 “지난 25일 강진으로 인해 반파 또는 균열된 집들이 이날 강진으로 완전히 파괴된 경우가 많았고, 간신히 시작된 피해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특히 전기가 끊기면서 주민들과 이재민들의 삶이 매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2차 구호단은 네팔 카트만두에서 50여km 떨어진 람릿푸르 마니길 지역에서 지난 8일부터 의료 및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고,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네팔 당국은 12일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이날 현재 65명이 사망하고 20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동쪽으로 76km 떨어진 코다리 지역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했으며, 지진 직후 규모 5~6에 이르는 수차례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이번 지진은 지난달 25일 규모 7.8의 강진이 난 뒤 17일 만에 발생했다. /최원필기자 cki@kwangju.co.kr

매 각 공 고
“요양병원”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매매 및 투자자)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19-1번지 (40m 대로변 접면위치, 건강관리협회 건너편)
대 지: 522.3㎡(158.15평)
연 면 적: 2,073.86㎡(627.96평)
층 수: 지하1층, 지상8층
건축물용도: 병원(요양병원)
허 가 번 호: 2013-건축과-신축허가-108호(2013.10.18)
토지소유자: 서양새마을금고
건 축 주: 서양새마을금고
공사완공예정일: 투자자 계약 후 3개월 완공 예정

※ 매각사유
 - 대출관련 유입물건을 매각합니다.
 - 유입당시 공정을 40% 진행되어 있는 요양병원 건물로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자 하신분께 매각하고자 합니다.
 ※ 계약착시 토지, 건물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소유권 이전

서양새마을금고
 전화문의 010-7659-8900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보조금사기·금융사기 / 성폭행·성추행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장)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